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긍정적'… 먹거리 불안 '과제'

文 정부 출범 1년… 농업정책 성과

AI 발생 225건… 6% 수준 감소
구제역 차단·스마트팜 보급 성과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먹거리 불안
동물복지형 축산 등 체질개선해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지난해 8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등 학부모·소비자단체 소속회원들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했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축질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 스마트팜 확산 기반 조성, 청년 창업·창농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은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대표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진행된 농업정책 중 대·내외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은 역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방역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방역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축질병 발생 이후에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매일 상황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시스템을 강화했다.

또 전체 가금 전업농장 5676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해 상시 점검 기반을 구축하고, 동절기 질병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육을 일시 제한하는 '오리 휴지기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22건에 그쳐 전년 동기간 383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6%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구제역 또한 올해 3월 국내 돼지에서 발생이 없었던 A형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사전에 비축한 백신 긴급 접종, 관련 차량과 시설 일제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해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선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을 적극 지원해 지난해까지 스마트 온실을 4010ha, 스마트 축사를 790호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창업보육시범운영기관 3개소를 선정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창업교육·경영실습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약 4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청년들이 농업과 식품 및 외식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한 것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 무상 제공, 농촌주민 거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대표되는 먹거리 불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육밀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축산업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환경에 부담을 주고 질병에도 취약한 축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유럽연합(EU)의 기준(0.05㎡/마리 → 0.075)으로 높였다.

또 산란계 신규농장은 올해 9월부터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은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는 계란의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방사, 평사, 개선된 케이지 등 사육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가축 분뇨 문제 해결과 악취 저감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고, ICT 기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이에 따라 밀식사육 개선 및 시설기준 강화, 축산분뇨·악취 관리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농산물값 상승… 정부 '밥상 물가' 잡는다

농식품부, 수급상황 전망·대책 발표
작황 부진에 평년보다 6.1% 상승
감자 수입량 늘리고 무 비축량 방출

최근 감자와 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급등 농산물 조기 출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요 품목 수급 상황과 전망·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산물 가격이 1~2월 한파, 지난달 일시적 저온, 일조 부족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출하량이 줄면서 평년보다 6.1%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며 "감자·무 등은 평년 대비 높은 시세고, 양파·마늘은 재배면적이 증가해 낮은 시세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자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저장 물량이 부족한 데다, 올봄에도 때아닌 한파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 부족으로 도매가격이 20㎏ 기준 한때 10만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자 공급 부족을 풀기 위해 노지 봄 감자가 출하되는 이달 말 이전에 수입량을 늘리고, 농협을 통한 조기 출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입된 감자는 1335톤으로 정부는 3075톤을 더 들여와 4410톤을 풀 예정이다.

무 역시 한파로 지난 겨울 저장량이 평년보다 55%나 줄어들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평양냉면이 인기를 끌면서 육수·고명에 쓰이는 무 수요가 늘어나 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는 이달 상순 20㎏ 도매가격 기준 평년의 2배에 달하는 2만6160원에 거래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비축 물량 144톤을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내놓고, 봄 무 계약재배 물량을 정상 출하 시기보다 일주일 당겨 시장에 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브라질서 한국식품 알려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2018 브라질 슈퍼마켓 박람회'(Feira APAS 2018)에 참가해 한국 식품을 알렸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개막해 10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오징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 5740t 푼다

해수부,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키로

해양수산부는 어한기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오징어, 고등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5740톤을 방출한다고 9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5515톤, 오징어 42톤, 고등어 93톤, 참조기 50톤, 삼치 40톤으로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 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민간이 수매해 보유하고 있는 오징어 재고량에 대해서도 방출을 유도해 오징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방출 대상 수산물의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허용… 노동자 정주환경 개선

산업부,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앞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돼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는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많은 산업단지가 생산시설(공장 등) 위주로 조성돼다 보니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았다.

이에 따른 열악한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으로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산업단지 관리권자,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해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과제들도 올해 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장애인 통계조사 3종 실시

정책수립 등 자료확보 일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취업, 실업 등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다.

올해는 이달 21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다.

2차웨이브는 장애인 직업역량 및 장애청년인구의 취업 동향 등을 보다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 및 문항을 대폭 강화해 타 고용조사의 내용과 차별화했다.

조사는 이달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밭작물 생산성↑ 비용↓ '물 관리' 기술 개발

농진청, 자동 물빠짐·물대기 가능

농촌진흥청은 논의 본래 기능은 해치지 않으면서 재배하는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저비용 물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논은 벼 재배 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성한 농경지로 이 때문에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침수나 과습 피해를 입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진청은 땅을 파지 않고 배수관(암거관: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지하에 고랑을 파고 묻는 관)을 묻는 '트랙터 부착형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과 자동 물 빠짐과 물대기 기능을 갖춘 논 지하수위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트랙터 부착형 무굴착 암거배수는 일반 트랙터에 매설기를 연결해 주행과 동시에 부직포로 감싼 땅 속 배수관과 충전재인 왕겨를 묻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흙을 깊게 뒤섞지 않아 땅속 양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땅의 수평을 깨뜨리지 않아 언제라도 다시 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